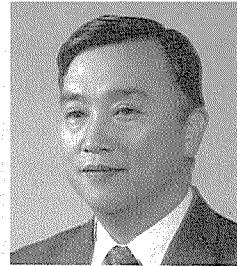


새로운 環境變化 對應을 위한 原子力政策 推進方向



鄭根謨

科學技術處長官

序 言

우리나라 原子力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귀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國原子力產業會議 이종훈회장님과 韓國原子力學會 임용규회장님 그리고 美國原子力學會 한국지부를 맡고 계신 강창순회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이론아침 참석해주신 원자력계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世界化를 통한 『21세기一流國家建設』이라는 중차 대한 時代의 行政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시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귀한 자리를 빌어 최근 원자력과 관련한 일련의 環境變化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原子力政策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자력계의 발전과 원자력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助言과 協助를 기대합니다.

原子力を 둘러싼 새로운 環境變化

어느해나 특별하지 않는 해가 없지만 1995년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기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으로는 分斷 50년을 마감

하고 統一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하며 밖으로는 WTO 出帆에 따른 개방과 自由貿易이라는 새로운 世界經濟體制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대규모 組織改編을 단행하였고 현재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改革方案 모색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變化와 改革의 시기를 맞이하여 원자력을 둘러싼 일련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 원자력산업은 1962년 TRIGA MARK II의 가동을 계기로 원자력의 씨앗이 이땅에 뿌리를 내린후 30여년만에 세계

10위권의 原子力 發展國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原子力 利用國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고 그동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韓國型 標準原電 설계를 통하여 최근에는 원자력기술수출과 대북경수로 기술지원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자력계의 중지를 모아『2030년을 향한 原子力長期政策方向』이 성안되었고, 中國과 원자력협력 협정체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발판마련과 함께 터키와는 원전 타당성 조사자문 계약체결 등 海外進出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구권국가들과의 협력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커다란 숙제였던 방사성廢棄物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는 등 많은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전력수요는 2006년에는 현재의 2배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원의 부족과 국제정세의 不確實性, 環境汚染등을 고려할때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의 의학·농학·공학적 이용은 더욱 확대·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기술수준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사업 추진과정에

서 先進國의 기술을 도입·소화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상용·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국내 RI 생산 능력 및 이용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國際的으로는 동서 냉전체제 붕괴와 지구환경 문제 대두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再評價 계기가 마련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를 원자력의 새로운 부흥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資源貧國의 전략적인 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원자력은, 급속히 발전하는 핵의학, 첨단산업 기반기술연구, 생명공학연구와 관련된 원자력의 응용개발 등 미답의 과학기술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주요 과학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美國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95년 정부예산에 신형 원자로개발 및 原子力利用관련豫算을 반영하여 원자력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世界 1位의 技術水準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건설과 운영허가등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원전건설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政府主導로 원자력개발체제를 확립하여 '93년

말 原子力發展量은 총 발전량의 77.7% 차지하고 있고 총 발전량의 12%를 輸出 하는 등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80년 國民投票에 의해 결정된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조치를 '91년 의회에서 다시 撤回함으로써 원자력의 계속적인 이용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原子力開發·利用長期政策의 일환으로 2000년 초까지 고속증식로 실증로 준공 및 2010년경 재처리시설 완공등 핵주기정책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원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中國까지도 21C에는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여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東南地域을 중심으로 광동1·2호기의 상업운전에 이어 진산2·3호기의 건설 및 광동3·4·5·6호기의 建設計劃 등 의욕에 찬 原子力 事業計劃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지아·베트남 등 개도국들도 21세기 초반에 원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등 개도국 원전 진출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이제까지 정부

의 보호하에 安住하던 國內 원자력산업계는 장차 世界의 競爭이 불가피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政府調達에 대해서 自由貿易主義를 추구하는『政府調達協定』이 '97년 발효됨에 따라 국내원자력산업 상당부분이 외국업체에게 잠식당할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原子力政策 推進方向

이상과 같은 국내외 원자력환경변화에 대응하여 科學技術處가 중점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은 원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우리의 원자력기술 및 산업수준이 초기基礎段階의 연구개발수준에서 產業定着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원전 중심정책에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가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을 수립·시행할 것입니다.

국내외 원자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개발·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선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개발·이용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長期的觀點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에『2030년을 향한 原子力長期政策方향』을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原子力振興綜合計劃』과『部門別 施行計劃』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된 原子力法에 반영하여 법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을 '95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종합계획은 국내원자력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國家次元의 원자력진흥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원자로기술개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등 원자력정책의 주요 10개 부문에 대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수립된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산업계·학계

· 연구계 등 民間部門에 원자력관련 활동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原子力研究開發事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中間進入戰略(Mid-Entry Strategy)으로 빠른시간내에 商業化에 성공한 韓國型原子爐 개발을 거울삼아 실용화이전의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선진국과의 국제공동/위탁연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선진기술도입으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기술(DUPIC), 핵융합연구 등의尖端基礎·基盤技術을 조기에 확보하여 이를 實用化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이 망라된 綜合科學技術로서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바가 지대하며, 특히 타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커서 관련 기자재산업 및 소재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로 대변되는 발전분야에 財源과 人力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국내 원자력 발전기술이 기술 도입기에서 기술성숙기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원자력이 지니

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새로이 개척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92년에 『原子力研究開發 中長期計劃(1992-2001)』을 수립하여 2000년대초 원자력기술 先進國 수준 진입을 목표로 정부 예산,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 및 民間財源 등을 포함 총 1조 9,8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원자로노형 기술 개발 등 8개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특성에 따라 政府 및 產業體 主導로 역할을 분담하여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主要推進目標를 보면 原子爐技術分野는 2000년 대초까지 차세대원자로를 개발하고, 核燃料週期技術分野는 원자로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중수로에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카나다 등과 국제공동연구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재 계획으로는 2008년경 부터는 관련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실용화 할 계획입니다.

原子力安全分野에서는 '96년까지 안전성평가 기술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고관리기술 및 미래원전의 안전성 기술을 확보해 나가며, 放射性同位元素 分野에서는 방사선 및 RI이용기술, 고준위 RI 및 선원개발, 유용한 RI회수 등을 년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의 독자기술로 건설된 세계수준의 최첨단 다목적연구로(하나로)를 國家目的에 맞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原子力基礎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원자력첨단소재 및 원전연료개발 등의 產業技術연구분야까지 그 이용을 확대하고 산·학·연에 널리 개방하여 이용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 꿈의 에너지라 불리우는 핵융합로가 실용화 될 것에 대비하여 未來의 에너지 확보와 첨단기초과학기술 확보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핵융합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기술개발 中·長期計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00년대초에는 국내의 원자력기술은 先進國 수준에 도달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력발전소를 국내기술로 설계·건설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는 물론 원자력이 輸出產業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最高의 技術力を 투입하여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시설로 건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원자력분야의 커다란 과제였던 放射性廢棄物分場 敷地가 선정되어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시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원자력발전량의 증가와 병원, 산업체등 放射性同位元素 이용기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綜合的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과 지원시설의 건설·운영계획 및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促進 및 施設周邊地域의 支援에 관한 法律을 제정('93. 12)함과 아울러 시설유치지역 지원계획 공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후보지역의 주민 초청 설명회,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 해외 방사성폐기물시설시찰 등 다각적인 주민 이해 사업과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汎政府의 협조체 아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4년 12월 22일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 굴업도 일원”을 최종부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절대적인 안전성이 보장된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2001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개발계획 열람, 地域協議會 구성 및 공청회 등 주민의

견 수립은 물론 「원자력시설 관련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며 地域開發의 핵심으로서 지원과 협조를 다 한다」는 기본자세로 地域開發基金 500억원 조성 등 시설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여 원자력 시설 지역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標本마을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原子力協力外交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海外進出을 촉진할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및 동남아 등의 開途國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원전건설이 침체되었던 先進國에서도 원전이용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側面에서 '80-'90년대에 걸쳐 가장 급속히 발전한 국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96년 OECD가입추진과 함께 國際社會에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다가오는 21세기에는 원자력이용을 주도하는 주요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원자력분야의 技術自立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는 美·日 등 原子力先進國과의 핵심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開發途上國과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原子力技術輸出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國際舞臺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 수준에 걸맞는 입지 확보 및 영향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94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原子力協力協定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총 11개국이며, 이중 原子力活動이 활발한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는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原子力共同調整委員會를 활용하여 차세대원자로개발등 핵심 원자력기술의 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하여 中國과는 '94년 10월 이봉총리 방한시 체결된 한·중 원자력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양국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난해 大統領 동남아 순방시 이루어진 필리핀과의 원자력 협력협정 가서명 및 인도네시아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의향서 교환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原子力協力を 강화하여 원자력설계기술등의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여함으로써 시작된 아·태 지역의 原子力協力事業(RCA)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의 원전도입의 타당성 자문과 훈련사업 국내유치 등 역내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등 新興工業國들은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사업 및 기술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海外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開途國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建設部 『』의 해외진출에 있어 국내기업간 과도한 競爭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해외진출전략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등 많은 폐해를 겪었습니다.

인력이나 기술면에서 先進國과 비교하여 볼 때 열악한 입장에서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뼈아픈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和合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海外進出을 위한 國內機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기관간의 協力과 役割分擔을 위한 『原子力 대외협력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입지 확보를 위하여 短期的으로는 '95년 9월부터 '97년 9월까지 임기 2년의 IAEA 지역 이사국 선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長

期的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규모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IAEA 常任理事國 진출을 목표로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95년도는 核擴散禁止條約(NPT)발효 25주년이면서 조약을 경신하는 해로써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이의 연장을 지지함과 아울러 核實驗禁止條約, 核武器減縮協約도 동시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등과 공동으로 對策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 공조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 원자력수출 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및 원자력 공급국그룹(NSG)에의 가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원자력안정성 제고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국내 최초의 自力計劃에 의한 다목적연구용원자로(하나로)의 가동과 국내 주도로 건설되는 영광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되며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이용기관도 최초로 1000 개 기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력시설은 운전중 원전이 10기, 건설 및 시운전 중 원전이 6기, 연구·교육용 원자로 4기, 핵연료 가공시설

2개 등이 되어 國際的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原子力施設 保有國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시설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를 통하여 國家施設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안전성 확보는 최고의 目標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原子力法 습에 따라 철저한 심사·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되, 특히 하도급업체의 품질보증체계 확인을 통한 시공상의 問題點豫防에 중점을 두고, 운전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운영기술지침서 및 관련 기술기준의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의 개선측면에서는 사업자와 안전규제기관과의 협의·지원체제를 강화하여, 環境·放射線管理側面에서의 감시·감독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海外專門機關의 초청·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도 확대해 나가되 건설추진중인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안전성도 국내외 전문가를 동원하여 설계, 건설의 각 단계마다 철저한 심사

· 검사를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의 원전사고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사고시 協力體系를 위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對北輕水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4. 10 美·北韓 최종 합의를 통하여 北韓 核問題 해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外交政策과 統一努力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은 우리의 標準型原電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다른 대안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 여유를 갖고 교섭하면서 언제든지 한국이 주계약자가 되어 『韓國標準型原電』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고 기술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수로지원을 통하여 남북 원자력협력 관계가 진전되는 경우 『韓半島 非核化共同宣言』의 실질적 이행과 더불어, 북한 기술인력의 훈련, 전문가의 상호파견 및 공동연구 추진등을 위한 『남북 원자력협력기본 합의서』의 채택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

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여 남북한이 동일한 安全基準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韓半島 전체의 원자력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結 言

우리 原子力界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원자력산업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는 制度와 政策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원자력계 스스로가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완벽한 기술개발 여건조성 및 효율적인 원자력 사업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先決課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자력계의 노력의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분야에서는 原子力產業界와 研究界간의 갈등이 표출되

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단합된 힘으로 원자력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原子力行政의 체계화를 통한 원자력 관련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관련기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자력계의 해묵은 課題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주요정책 수립시에는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事前協議制度를 확립하고 그동안 원자력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原子力專門家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이자리와 같은 민간차원의 원자력협력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보면 길게는 다음 반세기, 가깝게는 21세기를 대비한다는 차세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先驅者的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나라의 기업, 연구소, 대학과도 활발히 협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한 나라안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간에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原子力家族 우리들의 단합된 힘으로 원자력사업에 사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과 원자력이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최첨단분야로 바르게 인식되어 모든 國民들의 聲援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침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